

다산포럼



조운한
문화칼럼니스트

새해 첫날 해맞이를 위해 망우산에 올랐다. 몇 년째 연례행사처럼 산에 오르고 있지만, 이번에는 두 아이가 동행했다. 새해 소망을 물으니, 둘 다 청년 일자리 얘기를 꺼냈다. 사회 초년생인 이들은 처우가 나은 곳으로 옮기고 싶다고 했고, 딸은 지금의 직장에서 좀더 성과를 내었으면 한다고 답했다. 해맞이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각자의 꿈과 희망을 빌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가와 정부에는 어떤 바람을 갖고 있을 까? 지난달 말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5년 한국인의 의식·가치관 조사’는 주목할 만하다. 국민을 상대로 희망하는 한국의 미래상을 묻는 조사에서 ‘민주주의가 성숙한 나라’ (31.9%)가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28.2%)를 앞지르는 뜻밖의 결과가 나왔다. 1996년 조사가 시작된 이후 ‘경제 성장’의 가치가 줄곧 1위를 지켜왔는데, 처음으로 ‘민주주의’에 자리를 내어준 것이다.

경제나 복지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의 위기를 목도하면서 모두가 그 소중함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국가의 운영 원리를 넘어, 국민의 일상과 삶

다시 민주주의의 시간

을 지켜가는 소중한 가치가 되고 있다.

물론 성숙한 민주주의는 소망한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실천하는, 깨어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 곧 시작되는 ‘내란 재판’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을 가능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최근 특검 수사에서 보듯이 내란의 주범들은 반성할 줄 모르고, 극우보수 세력은 여전히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때 헌법 유린 사태에 대한 법원의 엄중한 단죄는 성숙한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관건이 될 것이다.

6월의 지방선거 또한 민주주의 성숙을 위해 놓칠 수 없는 시간이다. 지방자치제 30년이 지났지만 자치에 기반한 민주주의의 정착은 아직 갈 길이 멀다. 게다가 많은 농어촌이 지방 소멸 위기에 처하면서 지자체의 존립마저 위태로운 상황을 맞고 있다. 다행히도 7개 기초 지자체에서 올해부터 농어촌기본소득제를 도입하면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균등 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이 기대되고 있기는 하다.

이번 선거가 자치 민주주의를 한 단계 높이고, 중앙 권력 분산과 균형발전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

지난해가 인공지능(AI) 대중화의 문을 열었다면, 2026년은 AI가 시민의 삶 깊숙이 파고드는 실질적인 변화의 해가 될 것이다. 거대 자본이 선도하는 AI 기술은 스스로 학습하면서 거침없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 또한 공공부문의 AI 대전환을 기치로 내걸며 대대적인 예산 투자를 공언하고 있어, 그 기술이 어디

까지 진화해 갈지는 가늠하기조차 어렵다.

기업과 국가는 AI의 ‘효율성’을 앞세워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 등 장밋빛 미래를 그려내고 있다. 그렇지만 불확실한 미래, 시민 감시체계 강화, 권력의 중앙집권화, 문화 다양성 훼손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AI가 핵무기보다 위험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내놓고 있다.

거대 기업자본과 국가권력이 끌고 가는 AI는 이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다. AI 기술의 설계와 운용 과정에 민주주의의 가치가 적용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AI 기술의 알고리즘 편향성을 감시하고 데이터 주권을 지켜내는 시민 주권 의식 함양은 절실히 필요하다.

향후 이어질 관련 입법 과정에서도 유권자로서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는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AI의 성과를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독점하지 않고, 사회 구성원 전체가 향유할 수 있도록 시민 역량 교육을 강화해야 함은 물론이다. 이것이 AI 시대에 요구되는 ‘기술 민주주의’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시간을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로 구분해 불렀다고 한다. 크로노스가 특별한 의미 없이 그저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특별한 의미와 결단으로 충만한 시간을 말한다. 성숙한 민주주의를 위해 새해는 크로노스가 아닌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2026년은 모두가 정치 주권뿐 아니라 기술 주권까지 발휘하는, 깨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한다.

기본교육특별시 광주, 기본사회의 시작

다시 말해 의무교육이 공교육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면, 기본교육은 공교육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건을 마련하는 것이다. 광주는 이를 통해 회복·성장·행복을 동시에 추구하는 공교육의 성공 모형을 만들고자 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기본교육으로 공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을 필요로 한다. 계층 격차가 교육 격차로 이어지는 교육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교육복지 사업의 확대와 그로 인한 문제점이 양날의 검이 되었으며, 마음 아픈 교육 구성원의 증가와 학교 교육에 대한 안전이 갈수록 대두되고 있다.

또한 AI를 비롯한 디지털 기술은 미래 사회 생존을 위한 필수 역량이 되었고, 다문화와 국제화 시대 속에 글로벌한 마인드는 세계 민주시민의 필수 요소가 되었다.

이러한 사회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 속에 광주는 기본교육을 통해 학생과 교육 구성원의 회복, 성장, 행복을 추구하며 공교육을 보다 더 튼튼하게 만들고자 한다.

첫째, 교육 안전망을 통해 교육 구성원의 마음과 관계를 보듬고 회복시킬 것이다. 관계를 통한 마음 건강, 인성·생활교육을 강화하고, 안전한 공간에서 돌봄의 국가 책임을 높여 우리 아이들의 일상을 지켜나갈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기본교육 경비인 ‘꿈드림미’를

통해 학생의 요구에 맞는 보편적 교육복지지를 제공할 것이다.

둘째, 맞춤형 성장을 통해 각자의 다양한 꿈이 현실이 되도록 할 것이다. 각자에 맞는 배움을 위해 기초학력, 독서·인문, 진로·진학·직업, 문화예술·체육교육을 다양화하고, 미래 역량을 키우기 위해 수학·과학교육, AI 등 디지털 역량뿐만 아니라 글로벌 역량까지 두루 챙길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현재 초등에 머물고 있는 경제선지능 학생 지원을 중등까지 확대하여 기초학력 미달을 제로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셋째, 행복 공동체를 통해 소통과 협치, 광주다움을 키울 것이다. 교권과 학생 인권의 균형, 학교자치, ESG에 기반한 지역사회 협력을 강화해 함께 만드는 교육을 구현할 예정이다. ‘빛의 혁명’의 씨앗인 5·18정신을 내면화하고 세계화하여 ‘K-민주주의’의 수도 광주에 걸맞은 광주다움을 키울 것이다.

광주의 기본교육은 향후 광주교육의 주요 사업에 반영해, 다양한 실력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세계 민주시민을 키워 공교육의 새로운 도전과 성공으로 증명할 것이다. 광주교육은 공교육으로 키워낸 10년 만의 수능 만점과 ‘기술인재 특별한 대한민국 명장’의 성과를 기본교육을 통해 이어갈 것이다. 기본사회의 시작은 기본교육이다. 그 시작을 지금 여기, 광주에서 실천하고자 한다.

대학 과제의 공정성 논란 부른 AI 사용

연 공정한 것일까?”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기준이 없어 혼란스럽다”고 이야기한다. 이런 의견은 현재 대학에 다니고 있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고민하는 지점일 것이다.

AI가 학생 과제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진다.

우선, 반복적인 자료 수집이나 초안 작성 등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을 AI가 대신해 주면서 학생들이 보다 고차원적인 사고에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AI는 개념 설명이나 아이디어 발상에 도움이 되고, 이를 적절히 활용한다면 학습 보조 도구로서 긍정적인 기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이점이 공정성을 해치고 학습 본질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또한 제기된다. AI 도구를 무비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학생 개인의 문제 해결 능력이나 비판적 사고 역량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과제의 기본 요건인 ‘학생 본인의 사고와 표현’이 AI 결과물과 구분되지 않을 경우 평가의 의미 또한 퇴색돼 버린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같은 문제의식이 확산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학 차원의 대응도 시작되고 있다. 일부 대학에서는 AI 사용 범위와 기준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

다. AI 활용 시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거나 자체 작성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대학이 통일된 기준을 갖고 있지는 않으며 가이드라인의 실효성에 대해서도 평가가 엇갈린다.

또 다른 접근으로 AI 감지 도구를 활용해 과제의 AI 생성 여부를 판별하려는 시도도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현존하는 감지 기술 역시 오판률과 누락의 위험이 있어서 완전한 해결책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다.

전문가들은 AI 시대의 교육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순히 기술을 배제하거나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와 인간의 역할을 재정의하고 학습의 본질을 강화하는 방향성이라고 강조한다. 이미 AI가 검색엔진처럼 누구나 접근가능해진 현실에서 AI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현실성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 AI 기술을 전제로 새로운 교육 구조를 설계하고 과정 중심의 평가 확대를 통한 평가 방식의 혁신, 그리고 AI 윤리 교육 강화 등이 제안되고 있다.

AI의 영향력이 교육 현장에서 계속 확산되는 만큼 대학 사회는 공정성과 학습의 질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문화를 정립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社說

전남 국립의대 2027년 개교 차질 없어야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목표로 추진중인 목포대와 순천대 통합이 새해 들어서는 순조롭게 진행될지 관심이다. 지난달 23일 순천대 학생들의 반대로 두 대학 통합 대가 재투표 여부를 결정하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실 두 대학 통합은 대학 구성원 3차 인 학생·교수·교직원 찬반 투표를 거쳐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순천대에서 학생 60.7%가 반대 의견을 제시해 통합에 브레이크가 걸렸다. 대학측의 소통 부족과 전남도의 설익은 속도전이 학생들의 반감을 부른 원인이다.

두 대학의 통합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립 의대가 없는 전남에 국립 의대를 설립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다. 아쉽게 첫 번째 기회를 살리지 못했지만 통합의 명분이자 30년 숙원인 전남권 국립 의대 설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일인 만큼 지금부터라도 대학 구성원은 물론 전남도 등 관계 기관이 온 힘을 모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늦어도 이달 안으로 통합 찬성 의견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다. 순천대는 학생들을 상대로 재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과 논의해 평의원회 등 교내 기구 승인을 거쳐 추진하는 방안을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어떤 방법이든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2차 회의를 갖고 지난 달 말 발표한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보고서를 안건으로 올릴 예정이다. 따라서 2027 학년도 의대 정원은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는 결론이 날 전망이다.

전남 국립 의대는 2027학년도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원 100명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2027학년도 의대 정원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반영이 되지 않으면 내년 전남 국립 의대 출범은 불가능하고 통합도 무의미 하다. 30년 숙원을 대학 구성원 간 소통 부족으로 날려서는 안 될 일이다.

정부가 인정한 주거 해법 ‘전남형 만원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전남 기초자치단체들의 ‘만원 주택’이 국토교통부의 공모에 선정된 것은 정부가 주거 해법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월 임대료 1만원 수준으로 안정적인 주거를 확보하는 공공 임대 주택 정책이다. 진도·강진·곡성 등 전남 자치단체들이 빈집 해소와 젊은 층 인구 유입을 위해 도입하면서 입주 대기자 생길 정도로 전국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국도교통부가 최근 전남도가 제안한 전남형 만원 주택 7개 사업 모두를 선정해 1178억원의 국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은 성공을 인정해 전국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다. 7개 사업은 진도군의 ‘주거단지 속 청년의 희망’, 고흥군의 ‘복합문화센터를 품은 아파트’, 장흥군의 ‘숲을 품은 아파트’ 등 이름은 다르지만 전남 7개 시군에서 향후 3년간 530가구의 전남형 만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공모에 선정된 지역에는 청년과 신혼부부, 고행자 등 지역 수요에 맞춰 문화·복지·교육·체육시설을 갖춘 생활형 주거단지 조성된다. 단순한 임대주택이 아니라 주변에 생활 인프라를 함께 설계해 안정된 주거와 함께 재미 생활도 즐길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청년을 중심으로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지만 그 곳에선 비싼 임대료로 인해 조그만 방 한칸 마음 편히 갖기 힘들다. 지역에서보다 임금을 더 받는다곤 하더라도 주거비를 제외하면 남는 게 없는 현실이다.

국토부 지원으로 새로 생길 전남형 만원주택은 좋은 입지에 넉넉한 공간을 제공한다. 더구나 정부가 인정한 새로운 주거 해법이다. 주거비에 지친 수도권 젊은 층은 물론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전남도는 물론 해당 시군도 실제 현장에서 매끄럽게 적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길 바란다.

無等鼓

대통령은 물론 자치단체장만 바뀌어도 인돈은 인사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과거 정권이나 역사에 비춰보면 탕평 인사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권력에 대한 견제 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에서 언제나 긍정적이고 효율적이었다. 같은 당과 고향, 대학·교고 동문, 교회 등 친한 사람들만 ‘끼리끼리’ 해먹는 인사의 부작용은 12·3 내란사태처럼 국가를 결단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인사의 기준은 철저히 능력과 자질이여야 한다. 중국 한나라 고조에게는 ‘소하’라는 탁월한 재상과 그에

비견갈 인재인 ‘조참’이 있었다. 둘은 경쟁자일 뿐만 아니라 원수와 같은

정적 관계였다. 조참은 소하가 싫어 낙향해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소하가 죽었다는 소식이 들리자 조참은 가족과 지인들에게 상경 채비를 하라고 이른다. 주변에서 의아해하자 조참은 “소하가 죽기 전에 틀림 없이 후임으로 나를 추천했을 것이요” 이 후보자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함으로써 국화와 국민의 감증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설혹 이 후보자가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서인세력을 기반으로 반정에 성공한 인

조도 반대 당파인 남인의 이원익을 영의정으로 임명해 정권 초기 안정을 꾀했다. 중국 역사의 성공으로 꼽히는 당 태종도 자신을 죽이고 형을 황제로 세우려 한 ‘위장’을 도리어 중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에 국민회의 출신 이혜련 전 의원을 지명했다. 이 후보자는 3선의 야당 중진의원일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반대 집회에 참석했고, 이 대통령의 경기지사 시절 기본소득을 반대하는 등

현 정권과 국정철학이 다른 정적이나 다름없다. 결국 이 대통령 인사는 후보자가 미국

UCLA 경제학 박사과 한국개발연구원 출신의 경제통이라는 능력을 감안한 실용적인 탕평인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이 후보자에 대한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후보자는 자신의 실력을 입증함으로써 국화와 국민의 감증을 통과해야 할 것이다. 설혹 이 후보자가 검증 절차를 통과하지 못해 낙마하더라도 이 대통령의 탕평 인사는 계속되어야 한다.

/채희종 디지털본부장 chae@

청춘 특특



김부민
동신대 한의학과 3년

얼마 전 일부 대학에서 AI를 이용한 온라인 시험 부정행위가 잇달아 적발돼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시험 부정행위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기반 도구의 급격한 보급으로 대학가에 과제의 공정성 또한 새로운 논쟁의 중심에 섰다. ChatGPT, Bard, Claude 등 생성형 AI 서비스는 글 쓰기, 코드 작성, 자료 요약 등 다양한 과제 수행을 크게 간소화하며 학생들의 학습 방식에 변화를 불러왔다.

그러나 동시에 ‘정상적인 학습 과정’과 ‘부정행위’ 사이의 경계가 흐려졌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

주위 친구들도 “AI를 활용하면 자료 조사와 구조화는 빠르게 할 수 있지만, 그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것은 결국 내 실력이 아닌 도구를 이용하는 것인데 과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대표 FAX 222-4918〉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34	문 화 부 220-0624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경 제 부 220-0648	예 향 부 220-0692	〈FAX 222-0195〉	〈FAX 222-0195〉
사 회 부 220-0664	여 론 매 체 부 220-066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제 2 사 회 부 220-0680	사 진 부 220-0693		〈FAX 02-773-9335〉
	디 지 털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서로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